

길고양이 ‘던지기 급식’에 주민 생활불편 극심

5개 자치구 관련 민원 매년 증가…4년간 407건 접수 악취·소음 피해…“단속 법적근거 없어 계도·경고만”

주택가 골목과 도로변 등 생활공간에 길고양이 사료를 무단으로 뿌리는 이른바 ‘던지기 급식’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 자체를 제재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행정기관의 현장 대응도 신고와 계도에 의존하면서 반복적인 사료 살포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1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길고양이 무단급식이나 사료 살포와 관련해 접수된 민원은 2023년 88건에서 2024년 116건, 2025년 122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도 8월 말까지 81건

이 접수돼 최근 4년간 관련 민원은 모두 407건에 달한다.

주민들이 호소하는 문제는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 자체보다 생활공간에 사료를 무단으로 살포하면서 발생하는 2차 피해다.

남은 사료가 장시간 방치되면서 악취가 발생하고 비둘기 등 다른 동물이 몰려드는가 하면, 길고양이 개체 증가에 따른 울음소리와 영역 다툼 등으로 소음과 위생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남구 홈페이지 ‘구청장에 바란다’ 게시판에는 최근 무등시장 맞은편 월산동과 주월동 일대의 길고양이 사료



무단 살포를 둘러싼 민원이 제기됐다. 민원인 A씨는 “다량의 사료가 살포되고 고양이와 먹고 남은 사료는 비둘기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며 “고양이와 비둘기가 많아지면서 주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저녁이면 고양이들이 싸우는 소리로 소음이 발생하고 남은 사료가 빗물에 젖어 썩으면서 냄새가 나기도 한다”며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만큼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현장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확인됐다. 해당 지역 주택가와 도로 주변에서는 길고양이 급식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비닐봉지가 발견됐으며, 북구 용봉동 등 원룸과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도 일부 골목과 주택가 한쪽에 사료를 담았던 것으로 보이는 그릇이 놓여 있었다.

수몰 사이에 길고양이집을 마련해 놓는 곳도 확인됐다.

하지만 주민 피해가 반복돼도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자치구에서는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거나 사료를 뿌렸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사료 살포가 쓰레기 불법투기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가능하지만, 실제 행위와 행위

자를 특정해야 하는 만큼 현장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을 확인하고 행위자가 확인될 경우 계도나 경고하는 수준이다. 특히 CCTV 등을 통한 행위자 확인 없이는 실질적인 조치가 쉽지 않다.

급식용 그릇 등을 임의로 치우는 과정에서 급식 주민과 인근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거나 민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행정기관의 대응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고 종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개체 수 조절에 노력하고 있다”며 ““무단으로 먹이를 뿌리는 행위는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 계도나 경고를 하는 것 외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연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예보	06:37	달출	10:07
예보	17:59	달진	19:47



광주	☀️	12~20
목포	☀️	14~19
여수	☀️	13~21
순천	☀️	12~21
구례	☀️	11~20
광주	☀️	13~20
임도	☀️	14~21
흑산도	☀️	16~20
진남	☀️	13~21
진도	☀️	14~19

목포	밀물 (고)	03:52 / 16:35
	썰물 (저)	09:04 / 21:38
여수	밀물 (고)	10:55 / 22:46
	썰물 (저)	04:15 / 16:56

보호관찰 기간 무면허 운전

미세먼지 **확이하세요!**

○보호관찰 기간에 무면허 운전을 한 10대 청소년이 긴급구인돼 광주소년원에 유치.

13일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17)은 지난 10월 12일 불법적으로 빌린 렌터카를 운전해 보호관찰소에 출석했다가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돼.

A군은 지난 8월 광주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한 뒤 보호관찰을 받던 상황.

특히 소년원 임시퇴원자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고, 정해진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했다고.

이에 보호관찰소는 A군의 제비행 우려 등을 고려해 긴급구인한 뒤 광주소년원에 유치.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이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 내용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

양정훈 광주보호관찰소 사무관은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재범 방지와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학비노조, 전남·광주청사 교육감실 점거 농성

교육공무직 근무여건 통일·운동부 지도자 무기계약직 요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남·광주지부 조합원들이 13일 교육공무직 보충 교섭과 학교 운동부 지도자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무안청사 교육감실에서 동시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노조 20여명은 이날 오전 7시30분께 광주청사 교육감실에, 8명은 무안청사 교육감실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노조는 교육청 통합에 따른 전남·광주 교육공무직 근무 여건 차이 조정을 위해 보충 교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단체협약에는 중대만 사회·경제적 변화가 있을 경우 보충 교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광주지부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고용

안정 대책도 촉구하고 있다.

2024년 단체교섭 이후 ‘학교 운동부 지도자 고용안정 태스크포스(TF)’가 6차례 열렸지만, 대상자 60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뒤 진전이 없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통합교육청은 지역 간 처우 차이가 있는 직종 전반의 개선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노조가 2028년 2월 28일까지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해 통합 과정에서 우선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며 “광주와 전남 사이에 처우 차이가 확인되는 직종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협의체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사람의 짜장면 나눔’ 13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임동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광주봉사관 적십자 무료급식소에서 봉사자들이 어르신들에게 정성껏 준비한 짜장면과 음식을 대접하고 있다. 이날 준비한 짜장면 300인분은 박재홍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과 종식당 모노바스가 후원했다.

대법원 “관리자 동의 없는 불법체류 단속 위법”

목포 마사지업소 업주 무죄…단속·후속 수집 증거능력 부정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업소 관리자의 동의 없이 외국인의 불법체류 여부를 조사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업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7~8월 전남 목포에서 체류 자격상 취업이 불가능한 태국인 3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같은 해 8월 불법체류·불법취업 및 상매매 관련 제

보를 받고 직원 9명을 투입해 업소를 단속했다. A씨는 사전 동의나 양해 없이 업소에 들어왔으며 항의했지만, 단속은 계속됐다. 이후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A씨와 외국인 종업원 등을 소환 조사한 뒤 A씨를 고발했다.

1심은 업소 출입 일반인에게 개방돼 있고 공무원들이 마사지방 안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단속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A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관리자의 동의 없는 단속

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라도 행정조사 과정에서 관리자의 동의나 양해가 필요하며, 명확한 거부에도 공무원들이 업소 내부로 들어가 외국인들을 나오게 한 행위는 사실상 수색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2심은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뿐 아니라 고발서와 단속보고서, 외국인 진술조서 등 후속 수사에서 수집한 증거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위법한 단속에서 시작된 수사의 위법성이 이후에도 단절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고봉 기대승 유적 ‘국가사적 승격’ 종합 전략 윤곽

광산구, 14일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연구 결과 바탕 국가사적 지정 본격 추진

조선시대 호남의 대표 성리학자인 고봉 기대승(1527~1572) 유적의 국가사적 승격이 본격 추진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14일 청사 3층 중회의실에서 고봉 기대승 유적의 국가사적 승격 신청을 위해 추진해 온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한다.

연구용역은 고봉 기대승의 사상과 학문적 업적을 조망하고, 월봉서원과 구서원터 등 관련 유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가사적 승격을

위한 추진 전략과 유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종 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광산구는 고봉 기대승 유적의 국가사적 승격 필요성, 유적 가치를 높이는 구체적 활용 방안에 중점을 두고, 최종 점검할 계획이다.

연구용역과 더불어 지난달 30일 ‘고봉 기대승 유적 국가사적 승격을 위한 학술

세미나’를 열어 학계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행거기세 문중과 (사)승덕회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기대승 유적의 국가사적 승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특히, 학술 세미나에선 1570년 귀향해서 강화했던 신흥동 낙암과 사액을 받았던 신월동 구서원터 발굴 필요성, 월봉서원 훼손 이유 규명, 사적 지정 시사점 등에 관한 의미 있는 제안과 의견이 쏟아졌다.



고봉 기대승의 사상과 철학을 기리는 월봉서원.

다. 예고가 끝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최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고봉 기대승 유적의 국가사적 승격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며 “특히 월봉서

원이 고봉 기대승 선생의 학문과 정신을 계승하는 공간을 넘어 광산구를 대표하는 역사문화유산이자 호남을 대표하는 서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